

건설선진화 가로막는 ‘업역 칸막이’ 허문다

국토부 2018 업무계획

국토교통부가 생산체계 선진화, 발주제도 개편, 불공정 관행 개선, 부실·불법 업체 퇴출, 임금체불 근절을 올해 건설산업 정책의 5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 효자인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면서 원·하도급 간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건설시장을 흐리고 있는 부실·불법 업체를 쫓아내는 동시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올해 정책 목표 1순위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관련기사 23면

우선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생산체계와 발주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생산체계 선진화는 건설업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경직적인 현행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칸막이를 어느 선까지 낮추거나 없앤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원·하도급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발주제도 개편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선협상자에 대한 정밀평가를 거쳐 검증된 낙찰자에 시공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밀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역량 있는 발주기관에 한해 실시하고, 정밀평가 과정에선 기술자와 인력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건설산업의 고질병으로 인식되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을 손질하고, 하도급

올해 건설산업 정책 5대 키워드

- 1 생산체계 선진화
- 2 발주제도 개편
- 3 불공정 관행 개선
- 4 부실·불법업체 퇴출
- 5 임금체불 근절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구성

- 10월까지 개선방안 마련
-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위해
-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 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 하도급에 대해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상향하고 하도급 계약 전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10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부실·불법업체를 걸러내는 장치로는 기존 부실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건설기업 행정처분 이력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골자다.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는 고용보험, 건축 인허가 등 다른 정보망과 연계해 등록기준 점수를 강화하고 처분 이력 공개는 과징금 부과 횟수와 영입 정지 등에 따라 A~D로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다.

임금체불 근절과 적정임금 보장은 건설산업 일자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카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발주기관이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지역 대금 지급 시스템을 연말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기술자 중심·기능인력 보유로 전환
원·하도급 직접시공 의무대상도 확대
재·하도급 2진 아웃제 상반기 도입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은 ‘혁신’과 그 틀을 같이한다.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곳곳에 기존의 해묵은 정책 수단을 혁신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듬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먼저 기술자 중심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단순 노무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기능인력 보유 요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50억원 미만인 원·하도급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공 기술력을 높이는 동시에 페이퍼컴퍼니 퇴출 효과를 노리는 것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직접시공 인센티브는 직접시공 실적을 시공능력평가에 가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재·하도급이 7년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하는 ‘2진 아웃제’도 올 상반기 중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발주제도 개편은 변별력 강화와 적정 원가 산정에 방점을 찍었다.

국토부는 공공공사의 낙찰자 결정 전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정밀평가 과정에서 지방·국도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역량 있는 발주기관에 정밀평가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적정임금제 도입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공사원가 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 10월까지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TF에서는 표준시장단가 개선,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공공기관 부당특약 시정 등 구체적인 방안도 도출하게 된다.

원·하도급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선 보증료와 상호협력평가 등을 정책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상습적으로 저가 하도급을 주는 업체에 대해 보증료를 합증하고, 상호협력평가의 평가 방식 개선과 입찰가점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보호 차원에서 대물변제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임감 물아주기, 임감 가로채기, 입찰 담합 등에 철퇴를 가하는 방안도 마련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담는다. 우량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에 들어있다.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시공·설계 분야 중소기업에는 ‘혁신성장 건설팀 바우처’를 제공해 혁신성장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시켜준다.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은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과 임금체불 근절도 빼놓지 않았다. 퇴직공제부금 하루 납부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공사도 공공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이 3개월분의 체불임금을 1000만원 수준에서 대신 지급하는 임금 지급 보증제도를 5000만원 미만 종합공사 등 일부 소매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적용하고, 착공 전까지 보증 가입 후 발주기관에 보증서를 제출하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설시장의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건설기계업과 설계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방식을 계약건별 개별 보증에서 원·하도급 업체별 공사 현장 단위로 묶어 일괄 보증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설계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평가 때 적정 설계대가 지급 여부를 심사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18만명의 특급 기술자를 특·특2 등으로 세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경남기자 knp@

‘집값 안정화’ 지역별 맞춤형 대응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과열 또는 위축 등 불안이 발생하면 지역별로 즉각적인 맞춤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조달 혁신과제로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고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한다.

기재부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금리와 가계부채 등 리스크에 예의주시하면서 불안이 발생하면 과열 또는 위축된 지역별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택경기 가속도로 위축된 일부 지방도시에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해외인프라 수주

기재부 올해 업무계획 보고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 통해

과열 위축지역 나눠 즉각적 대책

종심제 보완, 기술 변별력 강화

공사비 적정성 확보방안도 마련

확대를 혁신성장 분야 정책과제로 포함할 것도 눈길을 끈다.

기재부는 오는 4월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과의 교통, 에너지 등 협력을 위해 신북방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영국 원전 등 중점 프로젝트는 국가별, 지역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합동 주주협의회 및 한·UAE 공동위 등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을 활용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투자형 도시개발사업 등 고부가가치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연간 금융지원도 작년 12조 500억원에서 올해 1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적극적인 국유재산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우선낙찰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공공조달시장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현행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심제를 보완해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고 공사비 적정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 마련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경기회복세를 유지, 확산교차 일자리사업 등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주요 지역별 프로젝트의 조속한 집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봉승권기자 skbcng@

■ 국토계획 패러다임 어떻게 달라지나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확장적 개발에서 압축적 재생으로, 신규 개발에서 기존 거점 역량 강화·도시재생 추진으로 국토계획의 개념을 확바꾼다.

이런 패러다임은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국토 장기비전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서 구체화한다.

국토부는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균형발전·분권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국토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보다 기존 도시재생 중점

경원선·동해북부선 등 인프라 연결

남북 경제협력벨트 기반조성 본격화

공공 건축물 추진 체계 획기적 개선

건설 위주 기존 법령 틀에서 벗어나

기획·설계 건축서비스법 적용 추진

또한 압축적 공간구조, 포용성 강화, 스마트·안전 국토 조성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오는 3월 국토종합계획 마련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초안을 만들고 내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국토계획의 큰 틀에서 남북 교류·협력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하고, 남북 경제협력벨트 조성 기반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남북 경제협력벨트는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DMZ(비무장지대) 환경·관광벨트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추진하는 경원선, 동해북부선 등 인프라 연결 작업은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백마고지~월정리역을 잇는 경원선의 공사를 재개하고, 강릉~제진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연결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 중인 서울~문산 간 남북 접경지역 고속도로는 2020년 제때 완공해 남북 간선 도로망 구축의 토대로 삼는다.

국토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 공공건축물의 추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축 특화 개발·관리 프로세스 마련이 핵심이다. 건축에 특화된 개발·관리 프로세스는 건설 위주의 기존 법령에서 벗어나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 단계를 별도로 규정하는 절차를 건축서비스법에 담는 방향으로 가시화한다.

역세권과 입체시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토계획도 올해 선보인다.

국토부는 교통·상업 등 상징성이 높은 주요 철도역을 복합개발하고, 평면 개발방식이 아닌 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토계획에 변화를 준다.

철도역 개발은 서울역, 수서역, 부산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입체시설은 올해 입체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북정역세권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성공적인 사업모형을 정립하게 된다.

박경남기자 knp@